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2026. 7. 15.

목 차

I.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1
II. 상반기 주요 성과	4
III. 핵심 추진과제	5
1. 역점 과제	5
2. 개혁 과제	10
3. 지방주도 성장 과제	13
4. 국가정상화 과제	14
[별첨] 경제·민생 입법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15

I.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 **(확실한 제도 개선)** 국회·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
 -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한 민간자문단 운영·AI 모형 활용, 국유 재산 헐값·부실매각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즉시 추진
 - * 300억원 이상 매각시 국회 사전 보고의무 부과,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수의매각 축소 등
- **(국민 만족도 제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 노력
 - 할당관세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과일 가격인하 효과를 확인*하고, 페이퍼 컴퍼니 등 무자격 업체 입찰 차단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 할당관세 적용 전·후 가격 인하(바나나 △4%, 망고 △20%, 파인애플 △11%, 냉동 고등어 △3% 등)
- **(소통 창구 확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정책에 담기 위해 노력
 - 부총리 현장방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업체* 운영 등을 통해 국민·기업 애로사항 및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 * 정부, 기업, 경제6단체(간사: 대한상의)가 상시 소통하는 플랫폼('26.3.12. 발족)

연번	지적사항	현황 및 조치계획	완료시기
1	조세지출 관리강화	○(현황)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지속 초과로, 조세지출 심층평가·예타 등을 통한 정비 노력 지속* * ('25년) 일몰도래 72건 중 7건 종료, 20건 재설계 ○(계획) 전체 조세지출 원점 재검토, 관행적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조세지출 효과성 제고	'26.12월
2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현황) 세수추계 거버넌스 개선*, AI 모형 활용 등 추계 정확도 제고 및 추계 이후 사후관리 강화** * 세수추계위원회를 민간자문기구→정부심의기구로 격상('26.2월) 등 ** 매월 세수 실적을 기초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 ○(계획) AI·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 등 추계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	상시 개선
3	부동산 세제 정상화	○(현황)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유예를 예정대로 종료('26.5.9)하되,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한 보완방안 마련 * '26.5.9.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종과유예 적용 및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의무(최대 2년) 병행 ○(계획)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26.12월

연번	지적사항	현황 및 조치계획	완료시기
4	페이퍼 컴퍼니 등 무자격 업체의 무분별 입찰	○(현황) 낙찰예정자 대상 입찰자격 사실조사 시범 실시로 '26.6월 기준 조사업체의 12% 낙찰배제 및 유사공사 대비 입찰자 37% 감소 ○(계획) '건설공사 현장 전수조사' 및 부적격 이력 기업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화·국고귀속 추진	'26.12월
5	할당관세 물가안정 효과 한계 지적	○(현황) 할당관세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 발표('26.2월) 및 유통 현황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26.3.9.~4.16.) * 집중관리품목 근거 신설,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반출기한 설정 등 추천 요건 의무화 등 ○(계획) 반출명령 신설,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해 관세법 연내 개정 완료 추진	'26.12월
6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 담배의 규제 회피 문제	○(현황) 정부 합동(재경부, 식약처 등)으로 규제 회피 행위 감시 → 법 위반사항 적발시 엄정 대응* * (고농도 니코틴 원액) 3건 적발하여 경찰 수사의뢰 ** (무니코틴 표방 제품)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105건 확인 → 13건 니코틴 함유 적발, 수사의뢰 ○(계획) ①법상 '니코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하고, ②식약처를 중심으로 유사니코틴** 유해성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 등 규제 우회 움직임을 차단 *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26.6.25, 입법예고) ** 니코틴(담배)은 아니지만,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적 분자구 조를 가진 물질(ex 6-메틸 니코틴) - ③민간 상호 감시·견제를 위해 비영리법인 등 활용하여 규제 준수를 유도	'26.12월
7	국유재산 헐값·부실 매각 (참여연대·경실련)	○(현황) 과거 매각사례('22.5월~) 전수조사 실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마련('25.12월) * 300억원 이상 매각시 국회 사전보고,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수익매각 축소 등 ○(계획) 매각 제도개선 방안이 반영된 국유재산법 개정안(박민규 의원, '26.4.27. 발의)을 신속 입법 추진 *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침을 통해 국회 사전보고 시행중	'26.12월
8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예정처, '26.5.12. <공공기관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	○(현황)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통합플랫폼 'K-마루' 시범사업 추진(1차 및 2차 선도지역 선정*) * (1차) LA·하노이 등 5개 선도거점 선정('26.2월) (2차) 베이징(민관협력), 다카르 등 2개 거점 추가('26.5월) ○(계획) 기존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38개 주요 도시* 대상 K-마루 본격 확대	'26.12월

II. 상반기 주요 성과

1 경기회복 및 초혁신경제 가속화

- (성장률) 계엄 충격에서 반등('25.上 0.4% → 下 1.8%, 전년동기비) 후 '26.1분기 3.8% 전기비로는 1.8% 성장하며 OECD 최상위권(38개 국가 중 3위)
- (세입기반) 국세수입 변동(조원): '23년△51.8 → '24년△7.6 → '25년+37.4 → '26년(전망)+41.5+α
- (지방일자리) 전국/비수도권 고용 증가폭 출범전후 11개월 기준 유일하게 동시 확대(전년비, 만명)
: (전국) 13.7 → 16.5, (비수도권) 3.0 → 15.4

- (경기회복) 중동전쟁 신속 대응, 국내외 시장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회복 및 잠재성장률 반등 기반 마련
 - 중동전쟁 관련 비상경제대응 체계 가동,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26.3.26.) 발표 등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 시장상황점검회의·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 관계기관 간 정책공조 강화
- (초혁신경제) 기존 선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 창출 기반 마련* 및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신규 지정
 - * 「소형모듈원자로법(SMR 특별법)」 제정('26.3월), 스마트 농수산업 선도지구(무안군, 고흥군) 선정 등
 - ** 산업 전반의 지능화·자동화를 뒷받침하는 센서·로봇 구동기 등 핵심 기반 부품
- (세입기반) 경제성장이 세수호조*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세부담 정상화를 통한 약화된 세입기반을 확충**
 - * '26.5월 누계 기준 세수실적은 199.9조원으로, 전년대비 27.5조원 증가
 - ** 법인세,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 통해 '26년부터 5년간 +35조원 수준 확충

2 한국경제의 글로벌 위상 제고

- (수출) 세계 5위 수준, '26.1~5월 쏙 기간 역대 최대 흑자 기록(1,412.8억불)
- (증시) 세계 7위('26.6.30. 기준) 수준, 6단계 상승(13위 → 7위)
- (국가경쟁력) 70개국 중 21위, 전년도 평가 대비 6단계 상승(IMD, '26.6월)

- (WGBI) 국채·외환시장 제도개선, 투자 설명회 등의 노력으로 선진국 국채지수(WGBI) 편입('26.4월~) 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및 보유비중** 증가
 - *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조원, 결제기준): (1월)+5.8 (2월)+7.9 (3월)+4.6 (4월)+8.8 (5월)+10.2 (6월)+11.8
 - **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 ('26.3월 말) 25.4 → (5.20.) 26.1 → (6월 말) 26.6
-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가동하여 자금유입 상황을 점검('26.4.1.~, 총 8회)하고, 추가 유치 노력 경주

- **(생산적 자본)**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 법적근거 마련*(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6.3.31., '26.4.26.)

* ❶국내시장 복귀계좌(RIA), ❷해외주식 환헷지, ❸해외자회사 국내배당 과세특례 신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 **(대미투자·전략수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의 체계적 이행 기반 마련
 - 한미전략투자 전반을 규정하는 「한미전략투자법」을 제정하고('26.3.12.), 한미전략투자 전담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26.6.18.)
 -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의 법적근거인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공청회('26.4.29.) 및 법안소위 논의('26.3.17., '26.4.29.)

3 **민생경제·공급망 등 안정적 관리**

- **(소비자물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에도 주요국 대비 안정적 관리(전년비, %):
3월 2.2, 4월 2.6, 5월 3.1 6월 3.2

* 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3~6월 평균): (韓)2.8 (유로존)2.9 (美)3.8<3~5월> (OECD)4.2<3~4월>

-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소비자물가 완화 추정(%p): 3월 △0.6, 4월 △1.2, 5월 △0.6, 6월 △0.4

- **(물가)** 물가 안정을 민생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가동('26.2.11.~, 총 12회) 등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
 -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로 석유류 가격을 안정화하고, 먹거리 할인 지원·공급확대 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
 - 바가지 요금근절, 전분당·밀가루·제지·돼지고기 업계 담합 등 민생물가 관련 불공정행위 적발 및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
 - * (예) 전분·전분당 담합 참여 4개 제조사 대상으로 역대 최고액인 과징금 7,476억원 부과
 - 할당관세 부당이득 편취 방지 등을 위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26.2.26.) 및 유통현황 합동점검 실시('26.3.9.~4.16.)
- **(공급망)** 재정경제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가동('26.3.25.~)하여 공급망 위기 즉각 대응
 - 나프타('26.3.23.)·석화원료('26.4.8.)를 공급망법 위기품목으로 지정하고, 나프타·석화원료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등 시행
 - 한시 규제유예 등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마련('26.4.3.), 전국민 공급망애로 핫라인('26.4.6.~21.)을 통해 국민 체감형 애로 개선

Ⅲ. 핵심 추진과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잠재성장률 3% + 수출 세계 4강 +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지향)

①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총괄지원 부처로서 적극 뒷받침

- 잠재성장률 반등 + 구조혁신(양극화 완화) 선도 +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

②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大도약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속도감 있는 추진 + 현장소통 강화 + 확실한 성과

1 역점 과제

1. 민생경제 안정화

① (물가) 민생 최우선 과제로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

- (먹거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확실하게 낮추도록 역대 최대규모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7~8월) 등 가용수단 총동원
 - 신선란 2억개 긴급수입(7~8월),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톤 직수입 후 저가 방출 등 공급확대 및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가격안정 유도
- (에너지) 국제유가 및 수급상황·국민부담 등을 감안하여 최고가격 해제를 검토하고, 필요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여부 등 검토
- (생계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 동결하고, 등유·LPG 사용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 대해 추가지급(+14.7만원) 동결기 적용
 -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화물차 등)·면세유(농어민) 유가연동 보조금을 9월까지 지급하고, 필요시 연말까지 연장 검토
- (시장질서) 매점매석 금지 위반시 과징금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물가안정법」 개정('26.下)

② (고용) AX·GX 등 산업전환 선제대응 및 부문별 고용여건 개선 추진

- AX·GX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인력양성, 재도약(이·전직 등) 지원, 일자리 창출·유지 촉진 등 정책대안 마련
- 제조·건설업 등 고용부진 업종 원인 분석 및 부문별 대응방안 마련

*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차관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

③ (환율·부동산)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주거안정 지원

- (환율) 24시간 외환시장 개방(7.6일) 등에 따른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공급 확대, 수요관리 등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④ (공급망) 공급망 구조 근본적 개선을 위한 단계적 대응 강화

- (국내생산·비축)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시 보조금 지원 및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비축물량 확대
- (해외생산·수입다변화) 국내생산·비축 어려운 품목은 해외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대체수입 지원(차액 전액대출) 등 수입 다변화 유도
- (위기대응)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26.下, 시범운영)

2. 잠재성장을 제고

①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역량 집중

- (3대 메가프로젝트) 산단·클러스터 지정, 전력·용수 공급 등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쏠부처 총력대응 지원 및 조정
 - (국유재산)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 및 기업 투자유인 제고
 - (공공예타) 전력망 구축(한전), 산업단지 개발(LH) 등 공공기관이 차질 없이 메가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타 절차 신속 추진
 - (세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역 우대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및 근로자의 정주 유인 제공

* 기업의 R&D·투자·고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시 지방 우대

**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 비과세 등

② (전략경제) 선도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금융지원 확대

- (전략산업) AI, 양자·보안, 방산 등 8개 분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 전략산업 분야 선도 프로젝트 발굴 및 예산반영 추진

- (초혁신) 초혁신경제펀드(가칭)를 조성하여 초혁신 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27년~) 및 차세대 전력반도체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성과 창출 지원
 - (첨단기술 보험) 첨단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실증부터 상용화 초기단계까지 사고위험 보장 보험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수출금융) 국가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정책금융 역량을 집중하고, 전략수출 모멘텀 강화 및 지원성과의 환류를 위한 기금 신설* 추진
- * 「전략수출금융지원법」 국회 통과('26.下) 및 기금 설치·운영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③ (녹색전환(GX))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 대전환 및 GVCN 추진

- ↳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발표 예정('26.3분기, 관계부처 합동)
- (메가프로젝트 지원) 재생e, 원전 등 전력·용수 공급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등으로 적극 뒷받침
 - (산업구조 대전환) 기술혁신·시장창출*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GX 이행을 지원하고, 대표 녹색산업에 대한 공공조달 확대
- * 수소환원제철 실증(~'28)·상용화(~'37), 전기로 NCC 개발(~'28), 저탄소 철강시멘트 공공조달 연계 등
- (세제지원) 대표 녹색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및 R&D·투자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예: SMR) 신설
 - (GVCN*)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과 협력하여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N) 구축 추진
- * 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Aligned with the Paris Agreement

④ (국부펀드) 자원·투자대상 등 국부펀드 운용방안 구체화

- (운용기반)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에 신설하고,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 추진
- * 외환보유액에 대한 대외신뢰도 확보를 위해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하게 구분회계 처리
- (자원 및 수익활용) 자원은 정부출자, 기부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하고, 수익은 재투자·배당·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
 - (투자대상·방식)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 인내자본(지분투자)을 제공하고, 해외 국부펀드 등과의 국내외 협업투자 등 추진
- * ①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전략산업(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
+ ②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 ③해외 공급망 등 국가경쟁력·경제안보 관련 산업

⑤ (한미전략투자) 전략적 투자이행 기반 안착 및 프로젝트 추진

- (대미투자: 2,000억불) 투자재원 조달 및 투자 집행 기반 마련, 양국에 전략적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 검토 및 추진
 -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전략적 이익·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의사결정 및 자금 집행 추진
- (조선협력투자: 1,500억불) 조선 분야 민간 직접투자(FDI), 선박금융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

⑥ (서비스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구축 및 생활밀착 서비스 질 제고

- (기본법) 제조-서비스, 융복합 신서비스업의 R&D, 수출, 인력양성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26.下)
- (생활밀착 서비스)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불편·애로 해소, 신서비스 출현 지원 등 생활밀착 서비스 분야 개선 지속 추진*
 - * 구독,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26.6.19)에 이어 숙박업 등 서비스산업 제도개선 과제 발굴

3. 양극화 대응

① (청년) AI역량개발 20(만명), 일자리·창업 30(만개), 주거 우선·충분 공급 등

- (AI 역량개발: 20만명+ α (~'30))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AI·반도체·GX 등)을 중심으로 K-뉴딜아카데미 등을 통해 청년 전문인력 양성
 - 양성된 전문인력을 기업·공공 등 다양한 분야와 취·창업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경력자산 통합관리체계(경력·이력인증서 발급 등) 구축 추진
- (일자리·창업: 30만개+ α (~'30))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창업가 10만명+ α 양성
- (주거) 청년에게 역세권 위치, 품질이 높고, 시세 대비 저렴한 新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공급
 - 또한, 즉시입주 가능한 매입임대, 저렴한 전세임대 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하고, 전월세 안정화기구 등을 통해 임차료 부담 경감
- (자산) 청년형 ISA 출시('27년) 및 중소기업 재직청년 자산형성 지원
- (결혼·출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산정기준 한시 완화 및 신도시 등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확대 등 돌봄 친화적환경 조성
- (문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대폭 확대하여 문화생활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현지 K-컬처 프로젝트 수행청년 등 지원 강화
- (거버넌스) 청년이 정책제안·결정·운영 등 청년정책 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추진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역량강화, 저소득층 안정화 지원

-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성장 시 세제지원* 혜택 감소를 완화하는 점감구간 신설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 (소상공인) 유망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 (저소득층) 저소득 근로가구 소득보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최저임금 상승 등을 감안한 소득요건 완화 등 EITC 기준 합리화

⇒ 양극화 완화정책은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경장 등 활용)**를 통해 재경부가 **총괄 조정**

4. 한국경제 글로벌 위상 제고

① (원화 국제화)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

- (인프라 구축) 외환시장 24시간 개방(7.6일) 및 역외원화결제시스템 도입('27.1월) 등 통해 해외 영업시간에 원화 조달이 가능한 외환시장 조성
- (원화 활용성 제고) 원화사용 경상거래 인센티브 확대, 해외차입 규제 완화, 야간 원화유동성 공급체계 구축 등 통해 원화 수요확충 및 공급확대
- (리스크 관리) 원화 국제화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외안전판 강화, 외환 건전성 제도 개편, 거시경제정책간 연계 등 다층적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② (MSCI·글로벌 IR)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및 국제사회 소통 강화

- (MSCI) 해외 소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26.7월~)」 신설
- (글로벌 IR)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정례화하여 한국 경제·자본시장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정책제언 수렴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③ (개발금융) 개도국 민간투자 활성화 및 EDCF의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

- (K-개발금융) 개도국 초대형 민관합동 개발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26.下)
 - * ①공적금융기관이 ②민간자원을 동원하여 ③개도국 민간 개발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금융수단 (지분투자·장기대출·보증 등을 통해 리스크 분담하여 민간자본 유인)
- (EDCF) 한국형 AI 시그니처 모델을 확산시킬 K-AI 패키지* 개발, 민간참여위원회(신설)에서 대형사업 승인 등 검토, 금리체계 개편
 - * 우리 기술·부품 기반으로 「AI Solution+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를 메뉴 형태로 제공

④ (대외협력)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및 글로벌 AI 허브 추진

- (경제협력)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상회담시 체결한 조부처 경제분야 MOU 이행상황을 분기별 점검**하여 실질 성과로 연계
* ('26.6월) 지난 1년간 체결한 84건 경제협력 MOU 점검 → ('26.9월) 이후 체결한 MOU 등 점검
- (포스트 중동) 「중동 인프라 협력 TF(팀장: 재경부 2차관)」를 통해 포스트 중동 대비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선제적 금융지원 및 G2G 협력 강화
- (글로벌 AI) 주요 국제기구 AI 기능을 집적하는 '글로벌 AI 허브' 조성 추진*(입지 선정, 지원단 구성, 국제기구 MOU 체결 등)
* 5개 다자개발은행(MDB) AI 협력센터를 선제적으로 국내 유치하고, 개도국의 AX 지원을 위한 시그니처 AI 프로젝트 발굴 추진('26.下~)

2 개혁 과제

1. 조세·재정 개혁

① (조세) 공정과세 및 경제 대도약을 위한 조세개혁 적극 추진

- (조세지출 개편)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구조 재설계, 효과적 재정지출로의 전환 등 획기적 정비
- (부동산 세제 합리화)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해서는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과세형평 제고)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
- (생산적 금융)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
* 대상을 국내투자자로 한정하되, 일반 ISA 대비 비과세 및 납입 한도 대폭 확대

② (국고) AI·블록체인 기반 운용혁신 모델 구축을 통한 국고관리 선진화

- (AI) 국고금 전용 AI를 통해 자금 미스매치 해소 및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능형 국채 관리시스템 도입 추진('27~)
- (블록체인)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세계 최초로 국고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하고, 거래비용 절감 등을 위한 국채 토큰화('27 시범사업) 추진
* 전기차 충전시설·업무추진비('26.下) 등 시범사업 통해 '30년까지 국고금 1/4 집행 목표

③ (K-Asset) 보존·매각·단순개발에서 가치창출형으로 국유재산 운용방식 전환

- (관리체계 혁신) 신유형 자산(IP·가상자산 등)을 포괄한 국가자산유형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개발 총괄기능·전문성 강화(국가자산기본법 제정)
* 現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 당시의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를 전제로 관리체계 설계

- (국유재산 전수조사) 연례적 총조사(현재 5년주기) 및 AI 기반 DB 구축과 함께 관리실태 감사(중앙관서·공공기관 등)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국민참여·이익공유) 국유재산 개발시 민간참여를 활성화*(신탁개발, 장기대부 등)하고, 국유부동산 유동화(STO)로 운용수익을 국민과 공유
- * 다양한 개발방식·주체를 포괄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통합지침」 마련('26.12월)

④ (국채) 국고채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 시장여건 조성

- 퇴직연금 계좌의 개인투자용 국채 직접 투자 허용('26.9월~) 등 내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안착*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 자금유입 촉진
- * WGBI 상시점검·투자유치 추진단 운영(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탁원), IR 강화 등

2. 공공 개혁

① (공공기관) 기능 통폐합, 안전관리 강화, AI 활용 등 전방위적 개혁 추진

- (HW개혁) 핵심 공공기관 전략적 구조조정, 유사·중복기관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자회사·해외지사 정비 등 추진('26.3분기~)
 - (SW개혁) AI 활용 확대를 통해 선순환 생태계(수요창출→기술발전→시장창출) 구축 및 공공기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하여 안전 최우선 '공공일터' 구현
 - 공공기관 AI 혁신 워크숍^{7월}, 청년 AI 서포터즈^{7월}, AI 활용 경진대회^{10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AI 활용의 성과·확산·체감 확대
 - 중대재해 발생 책임 있는 기관장 해임근거* 마련(공운법 개정, '26.3분기), 중대사고 다수 발생 위험작업장 실태조사 확대
- * (현행) ①경영실적 부진 ②금품비위 ③성범죄 ④채용비위 등 → (추가) 중대재해 발생 책임

② (혁신조달) 공공조달이 혁신기술의 '첫 구매자(First Buyer)'로 역할

-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 도입) 규격화된 전통적 구매방식에서 벗어나, 혁신기술 획득에 적합한 구매절차*(한국형 OTA) 신설('26.12월)
 - * ①(개방) 정부 제안 →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격 완성, ②(성과) 최종결과물 → 단계별 목표 달성(milestone)시 비용 지급, ③(유연) 변경 제한 → 계약금액·요구성능 등 탄력 변경
 - (혁신제품 제도 개편) 로봇 등 신산업분야 실증연계형 패스트트랙*을 확산하고, 지역현장 수요 및 혁신기술 발굴을 위해 지방정부를 지정주체로 추가**
- * 정부·공공기관이 R&D 결과를 직접 기술 실증하여 혁신제품으로 연계
- ** (현재) 중앙관서의 장(17개) → (추가) 광역지자체의 장(서울시·경기도 시범사업 예정)

3. 재정경제부 개혁

① (일하는 방식 혁신) 재경부 구성원 주도의 자생적 AX 추진체계 구축

- 주무관부터 부총리까지 전 직원 대상 AI 에이전트·활용 교육* 지속 실시
* 3~6월 총 3회 실시하여 직원 45명 수료, 7월말 부총리까지 교육 대상 확대
- 자발적 혁신문화 확산을 위한 AI 학습동아리 ‘AX집현전2.0’ 출범*
* 부내 AI 도구 개발수요를 접수 받아 실무형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제작·제공 예정
- 민간 현장 노하우 이식을 위한 ‘인공지능 자문단’ 운영 활성화(민간전문가 6인)
- 정부부처 최초 생성형 AI 행정혁신 해커톤 성공적 개최('26.6월 완료)
* 해커톤 대회와 3차례 AI 교육을 통해 40여 개 이상의 시제품 개발 및 우수과제 4건 선정
- 재경부 고유 통합 AI 플랫폼 ‘AI-ONE’ 구축 추진('26.下 시범운영)

< AI 활용 업무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례 >

제 목	주요 기능
국회답변 초안 작성	국회질의 소관 분류 및 국회답변 초안 작성 자동화
카드뉴스 생성기	정책 보도자료만으로 카드뉴스 자동 생성 및 부처 SNS 게시
세법개정 도우미	인용조문 개정 누락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 차단
공공기관 경영정보 분석	국민 모두가 쏙 공공기관의 정원·재무 등 정보를 손쉽게 비교·검증

② (소통 강화) 콘텐츠 다변화와 뉴미디어 기반 양방향 소통 강화

- 모모·페페(재경부 캐릭터)를 활용한 핵심 쇼츠 당일 제작·업로드 체계 구축
- 정부출범 1주년 경제 성과 쇼츠 100만뷰 달성
- 오보정정·사실확인 등 즉각적인 이슈 대응 콘텐츠* 확대 추진
* 장·차관, 실·국·과장이 직접 출연하는 ‘디지털 백브리핑’ 컨셉의 숏폼 영상 제작 등

③ (보상체계 보완) 성과를 확실하게 보상하는 3단계 인센티브 체계 구축

- (1단계: 소확행*) 일상 업무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한 직원(매주 1명)
*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 (2단계: 팀확행) 팀워크를 발휘하여 성과를 낸 부서(격월 5개팀)
- (3단계: 국민체감대상) 체감도 높은 혁신 성과 특별 포상(반기 7개팀)
* 포상금 총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성과 보상의 기쁨을 소상공인과 공유

3 지방주도 성장 과제

① (지방성장) 성장엔진 발굴 및 현장 소통을 통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 (성장엔진) 지역산업 여건, 국가산업 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5극3특 권역별로 차별화된 성장엔진을 발굴·선정
 - 3축(투자인센티브·산업생태계·기업활동기반) 7대 패키지* 종합 지원·조정
 - * ①재정, ②금융, ③세제, ④규제, ⑤기술, ⑥인재, ⑦인프라
- (혁신·투자 지원) 지방정부와 지방상의 참여로 「기업혁신 지원 민관 협의체」를 확대 개편하여 체계적인 5극 3특 지원체제 구축
 - * 정부, 기업, 경제6단체(간사: 대한상의)가 상시 소통하는 플랫폼('26.3.12. 발족)
 -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화 인프라 구축, 규제완화 등 적극 지원
- (수출지원) 해외바이어 발굴, 금융지원 등 지역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9개 도단위 지방정부와 수출진흥 협력협의체를 구축*
 - * 경기·제주·전북 旣 구축 + 금년 중 추가 6개(전남·충남·충북·강원·경남·경북) 구축 완료

② (지방우대) 비수도권 친화적 재정·세제·경영평가 제도 재설계

- (공공조달) 수도권을 포함한 기존 지역기업(발주기관이 소재한 행정구역 내) 중심 우대를 탈피하여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 도입
 -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 우대*, 비수도권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지역의무공동계약 확대 등 세부과제 마련('26.9월)
 - * (美) HUBZone(저소득·인구감소 등 낙후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10% 가격평가 우대
- (세제지원) 기업·근로자 등을 대상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 도입
 - (기업) 기업의 생산적 활동(R&D·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 (예: 기본 세액공제율 × 지역별 계수)
 - (근로자)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지방을 우대하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 비과세*
 - * (일반) 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원
 - (창업·벤처투자)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 지방우대 확대 및 비수도권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 (경영평가)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편람 개정 추진('26.12월)

4 재경부 9대 정상화 과제

- ① **[매점매석 근절]** 행정상 제재(과징금·이행강제금), 신고포상금 등 신설하여 불법이득 환수 및 수급불안 품목 신속유통 촉진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6.12월)
- ②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고용 관행 정상화]** 퇴직금 회피 목적의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금지 원칙을 마련하여 불공정 고용관행 개선
* 고용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반영('26.5.29. 완료)
- ③ **[할당관세 제도개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 강화, 반출명령 및 과태료 근거 신설 등을 통해 할당관세 제도 악용 방지
* 「관세법」 개정('26.12월)
- ④ **[국유재산 무단점유 근절]** 실태조사 체계화, 변상금 요율 상향, 원상 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활용 제고 등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제재 강화
* 「국유재산법」 개정('26.12월)
- ⑤ **[전관유착 방지]** 재경부 및 유관기관의 일거리 넘겨주기 등 전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점검 체계 강화
* (재경부) 수의계약 이해충돌 허위신고 방지 및 계약해지 제도화('26.7월 지침 개정)
(국세청) 업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자 사전검증 시스템 구축('26.6월)
(관세청) 재취업 관련 채용감사 확대 및 불공정 채용 관련 신고채널 운영
(조달청) 자체사업 발주 시 경쟁계약 확대
- ⑥ **[관행적 조세감면 정비]**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조 재설계, 효과적 재정지출로의 전환 등 획기적 정비
* 「2026년 정기 세제개편안」에 반영('26.7월)
- ⑦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하여 입찰 공정성을 높이고 품질 중심의 경쟁체계 확립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조달청 세부지침 등 개정('26.12월)
- ⑧ **[공공기관 공무직 처우개선]**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춰 공무직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인사·노무관리 기반 마련
* 「202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 개정('26.12월)
- ⑨ **[공공기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위험작업 실태조사 및 중대사고 다수 발생기관 대상 ‘공공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 **(추진실적)** 의원 면담·설명회, 이해관계자 공청회 등 다각적으로 추진* 하여 정기 세법·한미전략투자특별법 등 총 41개의 핵심 법률안 통과**

* 당정협의 23회, 국회협의 143회, 관계자간담회 38회, 공청회 및 토론회 4회 등

** (조세소위) 23개('25년 정기 세법 14개 포함), (경제재정소위) 17개, (한미특위) 1개

- ('25년 정기 세법개정) 기술주도 성장 촉진, 민생 안정,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위한 세법개정 완료('25.12.2.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개정)

* 여·야 소위위원 대상 방문 설명(10회 이상), 조세소위('25.11.12~30.) 1차관 대응 등

- (주요 법안 개정) ①담배규제 사각지대 해소, ②「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체계 마련, ③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등* 추진

* ①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까지 확대(「담배사업법」 개정, '25.12.2.)

②한미전략적투자 MOU 추진체계, 기금설치 등 법적근거 신설(「한미전략투자특별법」 제정, '26.3.17.)

③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26.3.31.)

- **(추진계획)** 「전략수출금융지원법」, 「국가계약법」, '26년 정기 세법 등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필요한 중점법안 연내 입법 추진

구 분	주요 법안	추진 현황
재경위 소위 상정 법안	「전략수출금융지원법」(전략수출금융기금 및 상생기여금 신설 등)	소위 상정(4.29.)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R&D, 수출 등 서비스산업 체계적 지원)	소위 상정(3.17.)
	「공공기관운영법」(공운위 구성 개편, 보수위원회 구성근거 마련 등)	소위 상정(3.17.)
	「관세법」(산업기술 침해물품 통관보류 가능 근거 신설)	소위 상정(4.10.)
재경위 상정 법안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법」(국세외수입 체납 징수관리체계 개선)	재경위 상정(2.27.)
	「공공기관운영법」(중대재해 발생 책임 기관장 해임근거 마련)	재경위 상정(2.23.)
발의 법안 (재경위 미상정)	「국가계약법」(중대재해 발생시 입찰제한 등)	법안 발의(3.12.)
	「국유재산법」(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등)	법안 발의(4.27.)
발의 예정 법안	「물가안정법」(물가안정조치 위반시 과징금 등 제재수단 신설 등)	발의 예정(8월)
	「대외경제협력기금법」(K-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발의 예정(하반기)
	「국유재산법」(변상금 요율 상향 등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리·제재 강화)	발의 예정(8월)
	「국가계약법」(혁신기술 촉진형 계약제도 도입)	발의 예정(9월)
	「한국투자공사법」(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 신설 등)	발의 예정(하반기)
'26년 정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개정안 발표(7월)

- 새롭게 구성되는 상임위에서 중점 추진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설명하고, 여야 이견 법안은 정부안을 마련하여 설득

* 하반기 의장단 등에 대한 부총리 예방('26.6.15.), 재경위 업무보고('26.7.7.)